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25 위원회 업무계획





목 차

I. 인권환경과 업무 추진 방향 1

II.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 계획 7

전략목표 I.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 10

- ①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11
- ②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14
-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16
- ④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18
- ⑤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20
- ⑥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24
- ⑦ 북한인권 개선 강화 26

전략목표 II.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29

- ①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30
- ②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32

③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35
④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38
⑤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42
⑥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45
⑦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47

전략목표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53

①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55
②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59
③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70
④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72
⑤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74
⑥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79
⑦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81

I . 인권환경과 업무 추진 방향

I. 인권환경과 업무 추진 방향

1. 인권환경

-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2024.8.29.)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조치 및 구체적 입법의 책임·의무 강조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에 끼칠 긍정적 변화와 영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차별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4.12.24.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차별, 사회적 배제와 노인 빈곤 등의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 자살률 증가, 은둔형 외톨이 청년 증가 등 20·30대 청년이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그동안 스포츠계의 자정 노력과 제도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변화에 대한 요구 및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착의 필요성 증대
- 노동을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 및 지지체계 확보 요구, 재화·용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고용과 교육분야에서의 장애인 차별, 장애인 탈시설 등과 관련된 현안과 함께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

- 2022년에는 성별임금격차가 31.12%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고, 상장법인의 임원 중 여성 비율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며, 유리 천장 지수(영국 이코노미스트)도 2013년 이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출생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존재 등 다양한 아동 인권 의제 제기
- 3만4천여명에 이르는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과 우리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 부정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필요
- 계절노동자, 가사돌봄노동자 등 이주노동의 다양화 및 규모 확대, 이주 아동 출생등록제도의 공백, 이주구금제도 및 난민심사절차 등 제도개선 요구 증대
- 부산·광주에 인권사무소가 설치(2005)된 지 20년을 맞아 지역인권보장 체계 점검 및 강화,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등 논의 확산
-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권한과 기능을 행사함으로써 인권의 증진 및 보호, 침해 예방을 위해 활동할 것을 강조(제57차 회기 결의안)하는 등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직원의 인권·직무 역량 배양

2. 업무추진 방향

□ 인권 현안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대응

-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권의제를 포착하고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정보공유를 통해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며,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필요
- 노인과 청년을 비롯하여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강화 방안 모색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속한 신기술의 발전이 딥페이크에 따른 인권침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인권환경 실사 법제화 등 기업과 인권 의제의 국제적 법제·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 마련

- 이주민·난민, 여성, 아동,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 시정을 위한 현안 대응 강화, 국제인권규범 이행 모색 등 인권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혐오차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 모색
- 국가인권교육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2024.11. 개정)에 설립 근거를 둠에 따라 법제 정비, 조직·예산 확보, 건축공사 관리,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국가인권교육원의 철저한 개원 준비
- 국제인권기준의 실효적 국내 이행 촉진, 국제인권규범 국내 확산, 국제기구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수행 및 국제사회 인권논의 주도

□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

-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인권·직무 역량 배양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로서 위상 제고
- 인권 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 인력 배치,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 등 도모
- 조직, 인사, 예산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적극적 역할 수행의 근거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의 업무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전략목표·성과목표 체계의 정비 필요성 점검

Ⅱ.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 계획

II.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 계획

전략목표 1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전략목표 2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전략목표 3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1.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권 보장 강화 2.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인권 보호
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1. 빈곤·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확대
3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1.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보호체계 정립 2.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1. 초고령사회 노인인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 2. 노인인권 인식개선 및 협력 강화
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1. 노동인권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2. 민간·공공분야 인권경영 확산 및 내재화 3.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및 국내외 협력 강화
6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1. 스포츠인권 강화
7	북한인권 개선 강화	1. 북한인권의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2.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공조 강화 및 네트워크 조성

①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1.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권 보장 강화 [사회인권과]

○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2024년 실시한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실태조사 결과 및 기초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등 추진

○ 재난과 인권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

- 재난·참사 관련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법령 제·개정 동향, 유엔 등 국제사회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주요 현안 발굴
- 국내외 정책 동향 모니터링, 간담회, 자문 등 추진

2.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인권 보호 [사회인권과]

○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적절성 검토를 통한 인권보호 방안 마련

-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 특히 취약계층이 마주하게 되는 피해 (생명권, 건강권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하고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 검토
- 정책 동향 모니터링,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등 추진

○ 기후위기 감축 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방안 검토

-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한 국내외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 검토
- 정책 동향 모니터링,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등 추진

○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

- 국내외 토론회 및 각종 회의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과 참여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간담회·토론회, 국내외 회의 모니터링 등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실태조사(채택 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정책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행 기후정책의 중앙집중적 관리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추진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조사,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2021)
- 노숙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감염병시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202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2022)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후위기와 농어민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2022)
-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2023)
-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2023)
- 「기후위기와 인권 관련 해외문헌 자료집」 발간(2023)
- 「인권의 관점에서 본 식량정의(food justice)」 국제컨퍼런스 참석, 제29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2024)
-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발표(2024)
-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24)

-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2024)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4)

참고

후속과제

- 재난 관련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2027)
- 기후위기 대응과 참여권 보장에 대한 정책 검토(2026)

②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1. 빈곤·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확대 [사회인권과]

○ 노숙인 등의 적절한 생활보장 정책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

- 2025년은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1~2025)」이 종료되는 해로, 정부가 제2차 종합계획 이행을 평가하고 제3차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3차 계획이 노숙인의 인간 존엄성, 생명권, 주거권, 건강권 등과 관련한 국내외 인권기준 및 권고에 부합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모니터링 및 정책적 대응 필요

○ 의료급여제도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정부는 2025년부터 의료급여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의료급여제도 관련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동향, 국내외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의견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의료급여제도 관련 정책 및 입법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 추진

○ 경제선지능 청년의 인권보호 방안 검토

- 국민의 약 15%가 경제선지능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경제선지능 청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입지 기반을 다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생활, 학업,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선지능 청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해, 경제선지능 청년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2022)
- 청년인권 의제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보고(2022)
-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2)
-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검토(2023)
-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3)
- 청년의 날 위원장 성명 발표(2024)

참고 **후속과제**

-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대한 의견표명 등 정책검토(2026)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1.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보호체계 정립 [인권정책과]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확산 및 고도화

- 위원회가 마련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확산 및 고도화함으로써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와 증진 도모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의 보급 및 홍보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해설서 제작 및 보완
- 국내외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관련 법령·기준 등 수집·분석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적용 사례 수집과 효과 분석

○ 딥페이크 부작용 방지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장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의 제작·유포로 인한 정보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증진에 기여
- 딥페이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초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전문위원회 개최 등

2.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인권정책과]

○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형사사법 절차에서 개인정보 및 통신의 비밀 보호 노력을 통한 정보인권 보호·증진에 기여
- 경찰, 검찰, 정보기관 등의 업무수행(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 정보 수집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간담회, 자문, 전문위원회 개최 등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데이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2021)
-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 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2021)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대한 개선 권고,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회재난 관련 기사의 댓글 게시판 운영금지)에 대한 의견표명(2022)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2022)
- 지능정보사회의 정보인권 발간(2022)
- 인공지능 법률 제정안 관련 의견표명(2023)
-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 발간, 국회 등 배포(2023)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도구 적용에 대한 의견표명(2024)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해설서 제작(2024)

참고 **후속과제**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확산 및 고도화(2026)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1. 초고령사회 노인 인권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인권과]

○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인구고령화·저출생, 지방소멸 우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 거주 노인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돌봄과 의료, 주거, 필수 생활 서비스 등 지역 사회적 기반 마련 및 확충을 통해 노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
-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2024) 결과 분석, 정부 정책 검토, 전문가 자문 또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인권에 기반한 치매노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돌봄방안 연구

-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수많은 지역에서는 주민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장기요양, 의료 등 사회적 돌봄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인권 현안
- 치매노인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치매를 앓더라도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과 의료, 필수 생활서비스 등 구체적인 실상에 관하여 노인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조사함으로써, 인권에 기반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 돌봄 방안 마련 필요

○ 장기요양기관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채택 시)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 내 신체구속, 강박 및 격리 등 시설 내 인권침해와 학대가 끊임없이 발생
- 신체구속에 관한 사항은 현행 「의료법」 제36조 제12호(의료기관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신건강증진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 내 억제대 사용은 법적 근거 및 절차의 명확성이 미비한 실정인바,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 노인인권 인식개선 및 협력 강화 [사회인권과]

○ 노인의 권리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 노인의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등 권리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
- 노인이 시혜나 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 누구나 공감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개선 추진

○ 노인인권포럼 운영

- 노인인권 전문가포럼 정례적 회의 개최(2021년 구성, 2024년까지 총 18회 개최)
- 노인의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등 노인인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인권 의제 설정,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등을 위한 포럼 운영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2021)
-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문헌 자료집」 발간(2021)
-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권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노인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법령 제도개선 권고,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2022)
-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2022)
- 「노인인권에 관한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문」 발간(2022)
- 치매노인 조기발견 시책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2023)
-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보호 제도개선 권고,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제도개선 권고(2023)
- 고용 영역에서 나이로 인한 노인차별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2023)
- 「유엔 인권이사회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보고서 번역 및 자료집」 발간(2023)
- 「고령자고용법」상 법정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2024)
-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2024)
- 「2024년도 노인인권포럼 종합보고서」 발간, 노인인권 인식개선 안내서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노인」 발간(2024)

참고 후속과제

- 인구감소지역 사회적 기반 등에 대한 공론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2026)
- 인권에 기반한 치매노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돌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 정책 검토(2026)

⑤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1. 노동인권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사회인권과]

○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현안 대응

-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인하여 노동관계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취약계층의 인권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회 입법동향 및 정부 정책 동향 모니터링 보고,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및 자문 등 추진

○ 대학 강사 노동인권 개선방안 검토

- 대학 강사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비롯하여, 직장 건강보험, 주휴일,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 적용에 있어 대학 현장에서 혼선이 있음
- 2024년 실시한 「대학 강사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처우개선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채택 시)

- 디지털 기술발전은 스마트폰·인공지능(AI)·전기차·신재생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킴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해당 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필요

2. 민간·공공분야 인권경영 확산 및 내재화 [사회인권과]

○ 민간분야 인권경영 견인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우리나라 민간기업에서의 인권경영 이행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필수 사항이 되고 있음

- 민간분야의 인권경영 견인을 위해 투자자(연기금, 국내투자자 등)의 투자 결정에 있어 인권경영의 내용을 중시하도록 국내연기금(국민연금공단)의 관련 정책 등 민간분야의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 견인 방안 검토

○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지원 방안 공론화

- 2024년 농수산식품 산업분야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체계 수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수산식품 산업 등 실사 법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공론화
-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제도·정책 동향 모니터링 보고, 관계자 간담회 및 자문 등 추진

○ 기업과 인권 관련 주요 법제·정책 동향 점검 및 검토

- 우리나라 기업(공공·민간 모두)들이 인권경영을 내재화하고 제도화의 흐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국내외 법제 및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 제정 등에 대한 의견표명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각종 법률 제정 관련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 동향 점검,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LBI 등) 및 국제 동향(유럽연합 등) 점검

○ 공공조달에서의 인권경영 실태조사(채택 시)

- 공공조달 절차 전반에서 인권경영 관련 제도, 인권영향평가 여부, 인권침해 발생 시의 구제 절차 등 실태 조사
- 공공조달에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 제고 방안 모색

○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채택 시)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들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역사회 소통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현지법인·자회사·협력업체 등 공급망에 대해 인권실사를 수행하는지 등 조사

- 공공분야 인권경영 실태 점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채택 시)
 - 공공분야의 인권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각종 인권경영 관련 보고사항을 통합한 양식을 마련하고 보고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업무 지원

3.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및 국내외 협력 강화 [사회인권과]

- 인권경영포럼 운영
 -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인권경영의 확산 및 내재화 도모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 방안과 주요 의제 논의

- 인권경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인권경영 관련 국제회의 참가, 국제기구·기업 및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21)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공기업 인권경영 평가 관련 정책간담회(2021)
-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및 인권경영 도서(ESG가 묻고 인권경영이 답하다) 발간 (2021)
-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2022)
-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공공기관 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2022)
-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추진 결과 보고(2022)
- 유엔 남아시아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 및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202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개선 방안 검토(2023)
-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 권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민간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2023)

- 옥외 등 현장 종사 노동자의 휴게 · 위생권 보장상황 실태조사,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 관련 분쟁의 대안적 해결방안 실태조사(2023)
- 생활폐기물처리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4)
- 농수산물식품 산업분야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체계 수립 실태조사(2024)
-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EU CSDDD) 번역본 발간(2024)
- 공공분야 인권경영 권고 이행실태 점검(2024)
- 상·하반기 인권경영포럼 및 다양성 협의회 개최(2024)
- 유엔 동북아시아 기업과 인권 워크숍 및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2024)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2024)

참고 **후속과제**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26)
- 공공조달에서의 인권경영 제도화 권고(2026)
-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인권경영 제도개선 권고(2026)

⑥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1. 스포츠인권 강화 [인권정책과]

○ 스포츠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 운영

- 타 기관 업무 활동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호 공유 및 협력체계 운영 등을 위한 현안 모니터링을 통해 스포츠분야의 인권침해 상시 점검
- 스포츠 인권 현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스포츠 윤리센터, 스포츠 인권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스포츠 인권 협의회 운영 기반 구축

○ 스포츠인권 관련 권고 이행점검

- 스포츠인권 관련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며, 권고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권고의 실효성 확대
- 확인 점검 및 결과 통지 실시로 미이행 기관의 추가적인 이행계기 마련

○ 취약분야 제도 개선

- 각종 운동부, 종목 협회 규정 확인 및 분석 결과보고 등을 바탕으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취약 종목에 대한 현안점검 및 위원회 모니터링, 사건조사결과, 자문 등을 통해 문제점 도출하여 제도 개선 사항 확인

○ 주요 체육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 전국 규모의 종목별 대회·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종합체육대회 등 주요 경기대회 현장에서의 인권상황 모니터링
- 경기대회에서의 인권 보장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친화적 경기대회 문화 정착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빙상종목 운동선수 및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21)
-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21)
- 스포츠인권 현장·가이드라인 정비 연구(2021)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백서(2019-2021) 발간,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안내서(스포츠가 버려야 할 것들) 발간(2021)
- 유튜브 홍보(스포츠 인권 리스펙트 시리즈, 즐거워야 스포츠다)(2021)
-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스포츠인권 현장 및 가이드라인 개정 이행 권고(2022)
- 스포츠인권 현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 정책 라운드 테이블 개최(2022)
- 스포츠인권 온라인 플랫폼 제작(2022)
-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훈련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표명(2023)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결정례집(2019~2022) 발간(2023)
- 스포츠 인권 협력체계 구축 및 발전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2023)
- 스포츠 인권 현장 및 가이드라인 개정판 책자 · 리플릿 등 제작(2023)
- 스포츠 분야 주요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2021~2024)
-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공유와 스포츠 인권 정책간담회 개최(2024)

참고 **후속과제**

- 주요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2026)

⑦ 북한인권 개선 강화

1. 북한인권의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인권정책과]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현안 대응 및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운영

- 북한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방안 검토
- 북한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정책적 개선과제 자문
- 관련기관 실무간담회 등을 통한 북한인권 현안,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 북한이탈주민 관련 상담과 진정 사례분석 및 정책개선 검토

○ 북한인권 개선방안 검토

- 2024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 관련 북한 아동 권리 실태조사', '북한 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북한의 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 도모

○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023. 9.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하나원, 하나센터에서의 법률·인권교육의 확대·강화 계획 발표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도모

○ 북한이탈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채택 시)

- 북한이탈여성의 탈북트라우마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 국내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강화

- 북한인권단체의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국내 연구기관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 강화

2.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공조 강화 및 네트워크 조성 [인권정책과]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공조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방안 모색

○ 북한인권 관련 국제인권기구 협력 강화

- 유엔의 북한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최종보고서 채택 모니터링 및 대응
- ‘북한 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활용, 취약계층인 북한주민(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심의 모니터링 및 대응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등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협력, 유엔인권이사회, 조약기구 등 협력 강화
-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대응방안 검토 및 국제협력 강화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인권NAP 권고를 위한 북한인권 관련 국가정책 분석 연구용역(2021)
-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위원장 성명(2021)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포용사회를 위한 위원장 성명(2022)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2022)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 위원회 방문(2022)
- 유엔 북한인권결의 자료집(2003~2022) 발간(2022)
-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및 인권보호 조치 촉구 위원장 성명,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상황에 대해 유엔에 공개서한 발송(2023)
- 북한인권법 시행 7년에 즈음한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권고(2023)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2023)
- 북한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 관련 북한 아동 권리 실태조사(2024)
-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추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위원회-통일부-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 개최(2024)

-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4)
- 북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참석, 북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결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4)
-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3~2024)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1~2023)
-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성명(2023~2024)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2021~2024)

참고

후속과제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2026)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1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혐오표현 대응 2.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대응
2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2. 이주분야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3.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3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 및 여성인권 의제 발굴 및 정책 연구 2. 성희롱·성차별 예방 모니터링 3. 성평등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인권조약 이행 모니터링
4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2. 장애인 인권 현안 모니터링 3.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 4. 장애인 관련 대외 협력 강화
5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인권 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2. 학생인권 등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마련 3. 취약 아동 인권 개선방안 마련 4. 시설보호 아동 인권보장 방안 마련 5.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모색
6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방안 마련 2.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개선
7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인권제도 심의 및 국제인권정책 대응 강화 2.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제고 3. GANHRI 및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 4. APF 교류·협력 및 APF 거버넌스위원 업무 수행 5. 국제인권 현안 대응

①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1. 혐오표현 대응 [차별시정총괄과]

○ 혐오표현 대응 역량 강화

- 혐오차별 대응 역량강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사례집 발간, 워크숍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역량강화 사업 등)
- 정부역할 모색을 위한 혐오표현 대응 해외사례 수집,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토론회 등 개최
 - ※ 행정안전부 협업사업으로, 2023. 8. ~ 2027. 7. 시행
- 혐오표현 실태 파악 및 대응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인권단체 참여 혐오차별 대응 포럼 운영

2.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대응 [차별시정총괄과, 국제인권과]

○ 평등법에 대한 국회 논의 등 지원(차별시정총괄과)

- 국회의원실 간담회·협의 등에 참여
- 평등법 관련 다양한 견해 모니터링, 쟁점 정리 및 공개적 논의 지원

○ 평등과 차별 금지를 위한 국제인권기준 모니터링(국제인권과)

- 유엔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실무지침 등 국제인권기구 자료에 대한 체계적 연구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의 실태 모니터링 및 연구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위원회 평등법 시안을 기초로 2021년 3개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2021)
- 혐오차별 대응 교재 개발, 정부홍보물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모색,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등(2021)
-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법제정 촉구 위원장 성명(2022)

-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관련 정치인 54개 언론사 보도 · 공약집 혐오표현 기획 조사, 제8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혐오표현 방지 위한 위원장 성명 및 협조 요청(2022)
-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실무지침 번역, 종교계 간담회(2023)
- 혐오차별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혐오대응) 관련 행정안전부 업무협약(2023)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혐오표현 예방 활동, 세계열린정부주관 혐오표현 예방 토론회 및 혐오차별 진단 토론회, 혐오차별 대응 포럼 등 개최, 기타 현안 모니터링 등(2024)
- 종교계 지도자 간담회, 평등법 입법 촉구 평등엽서 발송 등(2024)

참고 후속과제

-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 활동 계속(2026)
- 평등법 입법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논의 지원 계속(2026)

②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1.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인권침해조사과]

○ 이주민·난민 관련 법·정책·제도 모니터링

- 계절노동자, 가사·돌봄노동자 등 이주노동의 다양화 및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와 차별 방지, 노동권 등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 방안 검토
- 이주아동 출생등록제도, 미등록 이주아동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제도 등 이주민·난민 관련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실태 및 이행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이주노동자 사망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후속조치
-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 이주민·난민 보호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주구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 간담회(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등

2. 이주분야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인권침해조사과]

○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 및 국내 이행 모니터링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차~제22차 심의일정(2025.4.22.~5.9.)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독립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 대응 및 후속 조치 등을 위한 전문가, 관계자 간담회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국내 이행 방안 모색 및 모니터링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이주인권 인식 제고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이주인권 관련 국제기구 일반권고, 결정, 캠페인, 국내외 주요 이슈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 등을 통한 인식 제고

3.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인권침해조사과]

○ 이주구금제도, 난민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단체 및 정부 부처와의 협의
- 이주구금제도 관련 단체 및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 이주민·난민 보호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주구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 간담회(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등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인신매매, 착취방지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21)
- 선원 이주노동자 여권 압수관행,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 난민신청자 심사절차 등에 대한 모니터링(2021)
- 미등록 이주아동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제작 및 카드뉴스 배포(2021)
-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및 인신매매방지 모니터링(2021)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관련 위원장 성명(2022)
- 한국국적 아동 외국인 보호자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한 정책권고, 열악한 기숙사 환경 관련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 권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1·22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2022)
- OHCHR 국경에서의 인권에 대한 권장원칙과 지침 감수(2022)
-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2023)
- 계절 이주노동자 모집과정 및 인권상황 모니터링,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모니터링(2023)

-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제공 외국어 확대 등에 대한 정책권고, 난민인정심사 지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2023)
- 이주민 건강권 관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간담회(2023)
- 국경에서의 인권에 대한 권장원칙과 지침 관련 국제워크숍(2023)
-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관련 제도개선 권고, 외국 국적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외국인 보호시설 내 아동구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출국대기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4)
-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2024)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2024)
- 권역별·전국 이주인권대회 개최(2021~2024)

참고 후속과제

-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따른 최종견해 이행상황 점검(2026)
- 이주구금대안 관련 정책개선 권고(2026)

③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1. 성평등·여성인권 의제 발굴 및 정책 연구 [성차별시정과]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정책권고(안) 검토

-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권고(안) 검토·마련

○ 성평등포럼 운영

- 다양한 젠더 현안에 대한 토론과 합리적 모색을 통해 성평등 의제 발굴
- 주요 젠더현안에 대한 전문가, 여성단체, 종교계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전문가 및 관련 단체, 기관과의 협력 모색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수행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 등을 확인하고 차별개선 방안 마련

○ 성소수자의 성별분리시설 설치 및 이용 가이드 연구

- 대학내 성소수자의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 성별분리시설 설치·이용 현황 파악 및 현행법(공중화장실법 등)과의 충돌 등 연구

2. 성희롱·성차별 예방 및 모니터링 [성차별시정과]

○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 평석집 발간 및 분석 토론회

-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차별 결정례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성차별 조사 및 구제 이해 증진
- 노동위원회, 법원 등 판결례를 분석하여 차별판단기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해외 성차별 시정기구 결정례 분석

-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영국의 자문·조정·중재제도(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CAS) 등 해외 성차별시정기구에서 처리한 성차별 시정 결정례 연구

3. 성평등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인권조약 이행 모니터링 [성차별시정과]

○ 성평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

- '북경세계여성대회 그후 30년'(Beijing+30) 회의 참가 등을 통해 여성인권·성평등 국제사회 의제 연구
- 성평등 관련 해외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기반 구축

○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제9차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 2024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후 최종 견해의 이행 모니터링이 필요한 정책과제 선정
- 전문가 자문 등을 의제 목록과 목록별 인권 현황 등에 대한 분석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2021)
-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2021)
-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21)
-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발간,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22)
-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판례 분석 실태조사(2022) 실시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 의견 제출(2022)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 개최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2)
-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23)

- 형사사법분야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23)
- 성희롱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 제작(2023)
- 성평등포럼 운영(분기별)을 통한 지속적 성평등 현안 발굴(2021~2024)
-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2024)

참고 **후속과제**

- 성적지향 · 성별 정체성에 따른 실태조사 후속 정책권고안 마련(2026)
- CEDAW 최종견해 관련 당사국 이행 경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2026)

④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1. 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 장애여성 인권현황 실태조사

-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의 이중적 차별에 노출되고 있음
-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행위 종류·정도, 제도적·정책적 미비점 등을 살피고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 분석으로 장애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검토

○ 장애인 탈시설 이행 평가지표 개발 실태조사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구로서, 협약 일반논평 5호에 따라 기존 시설과 거주 서비스, 탈시설화 전략,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 매커니즘을 수립할 필요
- 협약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화 가이드라인 기준 분석, 장애인 탈시설 관련 다양한 쟁점 검토 및 탈시설 이행 평가지표 개발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 방안 검토

- 장애인의 주거권 실현은 빈곤과 지역사회 내 차별 등으로 인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련 자료 및 정책 동향 모니터링, 간담회,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장애인 주거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및 절차지원 서비스 확대 정책 마련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활동지원·동료지원·의사결정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안 마련
- 관련자료 및 정책 동향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추진

-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2024)에 따른 정책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2024년 실시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격리·강박 관련 정책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필요시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추진

2. 장애인 인권 현안 모니터링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인 차별 현황 모니터링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애인 차별 현황을 점검하여 차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차별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
 - 영상제공플랫폼(OTT, Over-the-top)의 장애인 접근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반하는 국내 법률, 장애 학생 개인별지원계획 및 통합교육 실태 등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영역의 차별유형, 원인 등 장애인 차별 분석
-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지 체계 모니터링
 - 발달장애인은 인간의 생애주기 동안에 각 단계에 요구·기대되는 일상생활 영위, 사회참여에 있어 특별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함. 특히 자폐성장장애인의 56.6%, 지적장애인의 32.5%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80% 이상이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어 가족 돌봄 의존도가 높은 현실임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제반환경·지지체계를 '돌봄'을 중심으로 종합적 분석,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재산 관련 사항을 스스로 판단·결정함에 있어 현행 돌봄체계의 한계를 파악, 제도적·정책적 미비점 보완 방안 제안

3.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 [장애차별조사2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평가 체계 구축
 - 협약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참여 보장 위한 상설 자문기구 형태 '(가칭)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포럼' 구성, 협약 모니터링 실태조사 활용 방안 등 협의
 - 관련 부처 등에 세분화된 통계 수집 체계, 절차 마련 등 협약 모니터링 이행 평가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권고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 협약 관련 국제 이슈 및 동향 분석을 위해 당사국회의 참석
- 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 기구로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애인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4. 장애인 관련 대외 협력 강화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개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일(4. 11.)과 장애인의 날(4. 20.) 즈음하여 본부 및 각 인권사무소에서 토론회 등 개최하고, 장애차별 현안 논의

○ 단체 및 기관 협력 강화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협력
- 장애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 현장 모니터링, 유관 기관 현장 방문, 협력 사업 발굴 등 실시

○ 장애정책 간담회

- 경계선지능인 인권실태 등 주요 장애현안에 대한 전문가, 장애인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진정사건 조사의 효과성 제고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21)
- 발달장애학생 교육환경 실태조사 후속조치(2021)
- 구금시설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권고(2021)
-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실태조사,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실태 및 이용자 인권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인권증진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2021)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이용 모니터링, 장애차별 판단기준 모니터링, 정신장애인 인권포럼 및 정책모니터링,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총 5건)(2022)
- 아동공동생활가정내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부당입원 등 인권침해 개선 권고(2022)
- 감염병 유행시기,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22)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개선 정책권고, 정신의료기관 부적절 자의입원 처리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및 개선 권고(2022)
- 장애인권리협약 독립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2022)
- 정신장애인의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실태조사(2022)
- 장애차별판단기준수립을 위한 연구(2023)
- 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황, 장애인 행정복지센터 접근·이용 현황 모니터링,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상생활(재화·용역차별) 모니터링(2023)
- 장애와 인권 현안 포럼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개최(2023)
- 정신장애인 인권 미디어 특 콘텐츠 제작(20개)(2023)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2024)
- 정신장애인 인권 미디어 특 콘텐츠 제작(17편)(2024)
-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차별시정" 토론회 개최(2024)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심 장애인 선거 참여 환경 모니터링(2024)
- 장애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2024)
-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쉬운 결정례 제작(2024)

참고 후속과제

-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협약 이행 평가(2026)

⑤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1. 아동인권 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인권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시선에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활동가 등을 통해 현행 정책의 실효성 및 사각지대 점검
- 정책 전문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아동인권 과제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

○ 아동인권 보고대회

-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결과발표, 아동인권 현안 발굴 및 논의의 장 마련

2. 학생인권 등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 기초연구

- 아동인권과 관련된 제도와 환경은 복잡해지고 있어, 아동·청소년 인권 사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일관성을 갖춘 판단기준의 정립이 더욱 필요한 상황
- 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 인권기준 등을 참조하여 학생인권 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3. 취약 아동 인권개선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 및 아동보호 방안 검토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요청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방안 마련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검토

- 질병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에게 가사노동 등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제기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위한 정책개선 방안 마련

○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

- 안정적인 주거가 없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황
-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취약아동 인권개선 해외선진사례 조사

- 영국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법령을 마련하고, 여러 정책에 분산된 관련 지원체계를 통합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바, 영국 등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취약아동 인권증진 정책의 모범사례 확보

4. 시설보호 아동 인권보장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시설보호 아동 및 종사자 설문·면접조사 등), 아동복지시설 관련정책의 미비점 점검과 해외 모범사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개선 및 인권친화적 아동보호시설 구성 정책 모색

5.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모색 [아동청소년인권과]

○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대응

-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준비
- 인권조약기구 권고사항 이행 점검 및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도모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청소년 참정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소년사법 제도개선 권고,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제도개선 권고, 영·유아용품의 색깔 및 역할의 성별 구분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의견표명(2021)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2021)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증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2022)
-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 실태조사,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2022)
- 서울시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의견표명,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 이주아동 유아학비 제외 제도개선 권고, 외국인 아동의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차별 제도개선 권고,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위원장 성명(2023)
- 학생인권 보장 학교규칙 실태조사,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2023)
-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2021~2024)
- 체육특기생 선발시 여학생 배제 시정권고, 상업시설 등의 아동 이용 제한 시정 권고, 대학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견표명,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종합정책검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정책검토(2024)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현황 연구(2024)

참고 **후속과제**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증진 정책검토, 아동인권 모니터링 및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 회의 대응(2026)

⑥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방안 마련 [인권정책과]

○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도 확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권 행사의 적정성 등 검토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및 증진
-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

○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검토

-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기여
- 선행연구자료 검토,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의견 수렴

2.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개선 [조사총괄과]

○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개선

- 2024년 집회와 시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한 집회와 시위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국회 집시법 개정안 및 집회 및 시위 관련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검토
- 현재의 집시법 관련 주요 위헌법률심판 사건 및 법원의 집시법 관련 판결내용 모니터링
- 집회 및 시위 관련 전문가 자문의뢰

○ 집회 등 인권현안 모니터링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

- 집회 현장 및 언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필요 시 인권지킴이단 운영)
- 업무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업무협력 및 효율적 대응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참여권 보호 강화에 대한 권고안,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 · 수색 절차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권고안 상임위 상정(2021)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관련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2022)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한 위원장 성명(2022)
-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2022)
- 행정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법무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차별적 평가요소 개선을 위한 권고,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표명(2023)
- 피조사자의 기본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환경 개선방안 연구,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23)
- 형집행법 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관련 토론회(2023)
- 집회 및 시위 대응방안 계획(안) 수립에 따라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집시법 일부 개정안 검토(2023)
- 노동절 집회 및 서울퀴어퍼레이드 등 인권침해 상황이 우려되는 집회 현장 및 언론 모니터링 실시로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감시(2021~2024)
- 수사기관 관련 위원회 권고이행 모니터링(2021~2024)
-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형집행법령 개정 방안 권고(2024)
-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발간(2024)
- 집회 및 시위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집시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소음 관련) 등 검토(2024)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강화 제도개선 권고(2024)

참고 **후속과제**

- 집회와 시위 관련 각종 법령 개정안 및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및 검토(2026)

7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1. 국제인권제도 심의 및 국제인권정책 대응 강화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 고문범죄의 형법 반영을 위한 연구 실태조사(인권정책과, 채택 시)

-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정의를 형법에 명시하는 등 사항을 반복적으로 권고
-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정의 분석, 해외 법제 비교·분석, 법개정 방안 등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개선 참고자료 확보

○ 강제실종방지협약 정부 심의 및 이행법률 제정 대응(인권정책과)

-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에 따라 최초 국가보고서 제출(2025.2.) 및 국회 발의된 이행법률안 제정 지원 예정
- 유엔 강제실종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와 이행법률안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국내 이행 촉진

○ 자유권 분야 유엔조약기구 권고사항 이행 방안 모색(인권정책과)

-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제4차 심의,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심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2023년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을 통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도모
- 국제사회의 권고 관련 해외사례 및 선행 연구 자료 검토,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구체적 과제 선정 및 개선방안 검토

○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사회인권과)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 채택 일정(2025.9.8.~10.3.) 공지
- 쟁점목록 작성에 참고할 인권위 의견서 제출(2025. 6. 16. 기한), 사전심의 참석

○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공론화(사회인권과)**

-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필요성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관계자 간담회(또는 협의회, 포럼 등) 개최

○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 및 유엔 협력**

- 제58차 ~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 모니터링·분석·결과보고
- 유엔 인권이사회 안건 중 위원회 업무 관련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성명 등 제출

○ **위원회 국제인권 정책 지원체계 구축**

- 위원회 내 국제인권 정책, 국제협력, 국제홍보 유관부서 간 정보 교류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업무 역량 강화
- 위원회 내 당해 연도 국제업무 추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유엔노인권리협약 성안 논의 모니터링**

- 2024년 OEWGA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노인권리협약 성안 TF 구성 등 후속 조치 논의가 유엔 제네바 대표부 및 국제노인인권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노인권리협약 성안 노력과 관련한 국제 논의를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관련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

2.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제고 [국제인권과]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자유권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비준 촉진
- 관련 인권단체, 유관 학회 등 공동 협력하여 간담회 개최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확산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학계, 시민 사회, 대중의 인식 제고 및 국내 이행 촉진 및 위원회 업무(정책, 조사, 교육, 홍보 등) 추진을 위해 국제인권규범 자료의 번역 및 배포 추진
- 유엔 인권기구(총회·제3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조약기구, 국가인권기구 관련 자료와 지역 인권규범(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등) 관련 자료 수집·번역·감수·배포

○ 국제인권기준의 실효적 국내 이행 촉진

- 유엔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지방정부에 의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방안 연구(용역)」 추진

○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접근성 보장

○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콘텐츠 내실화

- 국제인권규범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파일 변환(docx), 국·영문 비교, 책갈피, 연계 설정(핵심 인권조약-조약기구 일반논평/ 권고-최종견해), 분류검색 지정(기구-주제-대상)하여 시스템 콘텐츠 내실화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GANHRI 및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 [국제인권과]

○ GANHRI 활동 참여를 통한 국제역량 강화 및 인권 논의 확산 도모

- GANHRI 관련 회의(총회, 집행이사회, 세계인권기구대회 등) 참가, 안전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한 회원기구의 역할 수행
- GANHRI 기후변화와 인권 코커스 회원기구로서 해당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위원회 활동 소개

- GANHRI 주요 인권논의 참여 또는 관련 자료 배포 등을 통한 위원회 국제 역량 강화 및 국내 선진 인권 논의 확산 도모
- 국가인권기구 및 유엔기구,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 및 노인인권 의제 선도**

-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기구로서, GANHRI 내 노인 인권 의제 공론화 및 유엔 인권체계(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노인인권독립전문가 등) 내 활동 선도
- GANHRI 노인인권 실무그룹 회의 개최(연 2회) 및 국제기구 내 노인 인권 인식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회의 개최

4. APF 교류·협력 및 APF 거버넌스위원 업무 수행 [국제인권과]

○ **APF와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

- APF 연례회의·거버넌스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인권 현안 대응 강화
- APF 사무총장 회의, 인권 현안 대응 회의, 역량강화 세미나 등의 참석을 통해 APF 회원기구 간 협력 강화 및 APF 인권 의제 선도
- APF 거버넌스 위원으로 지역 간 네트워크 회의, 유엔 회의 등에서 국제사회 인권논의 주도
- 아·태지역 인권 현안 적극 대응

○ **APF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APF 소속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홍보, 국제인권현안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 인권 기구간 경험 공유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위원회 직원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인권 현안 능력 배양

5. 국제인권 현안 대응 [국제인권과]

○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국내 정책 및 실태 검토,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한 국내외 이해관계자간 논의, 유엔인권협약의 가입·비준·이행 등 관련 부처 및 인권단체 논의 등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통한 인권현안 논의
- 국내외 주요 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 도모

○ 국제인권동향 및 온라인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 유엔 등 국제기구의 주요 인권의제, 국제회의, 국가인권기구 및 NGO 활동을 소개하는 국제인권동향 작성 및 배포
- 위원회 주요 권고 및 행사를 소개하는 영문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제3차 UPR 권고 이행에 관한 정부의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 제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2021)
-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쟁점 간담회,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 쟁점 간담회(2021)
- GANHRI 승인소위의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에서 A등급 유지(2021)
- 유엔인권조약기구 40년간 정부대상 권고 등을 심의 차수별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게시(2021)
- 유엔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 이행을 위한 간담회, 헌법재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토론회(2022)
- 제4차 대한민국 UPR 심사 관련 인권위 독립보고서 유엔에 제출, UPR INFO 사전세션에 참석(발표)하여 우리나라 주요 인권과제 제시(2022)
- 제27차 APF 연례회의에서 APF 의장으로 선출되어 의장(2022~2024) 수임(2022)
- GANHRI 노인인권 실무그룹 상/하반기 회의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노인인권 의제 선도(2016~)
- 유엔노인권리협약 초안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 및 자문위원회 운영, 유엔노인권리협약 마련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2022)
-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심의 대응(2023)
- 제5차 자유권위원회의의 대한민국 심의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2023)

-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토론회(2023)
-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실효적 이행방안 토론회,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쟁점 간담회(2023)
- 「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방안 연구-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가입 및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실시(2023)
-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2024)
-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2024)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방안 간담회(2024)
-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2024)

참고 **후속과제**

- 제4차 UPR 권고 이행에 관한 정부의 중간보고서 모니터링 및 위원회 의견 제시 (2026)
- 유엔 고문방지협약상 고문 범죄의 형법 반영 검토(2026)
-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2026)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정사건 조사 2. 진정접수·민원처리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공감·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 4. 조정제도 활성화로 권리구제 효과 제고 5. 조사 역량 강화 활동 6. 조사절차의 개선 및 정비 7. 기획조사 강화
2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교육 제도 개선 및 기반 확대 2.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3.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기반 조성 4. 인권교육 연구 및 콘텐츠 강화 5.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6. 인권교육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7. 지역 인권교육 활동 8. 인권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9. 인권콘텐츠 개발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 10.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11. 지역 홍보 활동
3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 2. 지역 교류협력 활동
4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2.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5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2. 방문조사 활성화·내실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3. 군인권 현안 적극 점검·대응 4. 군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대응 강화 5. 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 6. 군 인권 국내외 협력 활성화 7. 효과적인 군인권업무 지원체계 구축
6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정책 추진 관련 기획·분석·평가 및 조정 2. 권고·의견표명 이행실태 확인·점검 3. 인권NAP 이행 모니터링 및 제도화 4.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관리
7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 2. 위원회 성과 관리 3.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4. 전략적 자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5.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6. 안정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7. 체계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8.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제고 9.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10.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1. 정보화기기 개선 및 정보보호 수행 12.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13. 교육 내실화를 통한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14.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 15.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16.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17. 청사관리 및 보안업무 강화 18. 예산의 효과적 운용 및 회계·결산의 체계적 관리

①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1. 진정사건 조사 [조사부서 공통]

○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장기사건 최소화, 권리구제율 및 진정인 만족도 제고
- 직권조사 및 긴급구제 요청사건 등 현안 사건 적극적이고 합리적 대응
- 현장조사·기초조사 강화, 사회 현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관 지정 및 조사팀 구성을 통한 대응
- 장기사건 및 특이사건의 적극적 대응, 효과적 관리·점검

○ 시각장애인 등 정보접근권 관련 자문 체계 운영 (장애차별조사1과)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사건은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기술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조사관이 확인하기 어려운 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조사 진행 필요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결정례 등의 정보를 알기 쉬운 자료집으로 제작

2. 진정접수·민원처리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사무소]

○ 민원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 (인권상담조정센터)

- 지속적인 조사부서 및 인권사무소와의 소통·의견 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진정 접수 방안 모색
- 안정적 민원 처리를 위한 인권사무소 민원처리 담당자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 **진정권 보호를 위한 진정함 관리실태 점검**

- 구금·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및 관리상황 점검
- 진정함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시 관리자 면담, 시설 인권상황 및 시설 내 상담 및 조사실 실태 및 현황 파악 병행

3. 공감·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 [인권상담조정센터]

○ **인권상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전화상담시스템(CT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 관리
- 클라우드 시스템, 회선상태(수·발신), 서버 상태 체크 등 점검

○ **인권상담의 전문성 강화**

- 전화상담, 접수대 근무, 대면상담 시 특히 민원인 대응 교육 실시(상담사 상담 매뉴얼 교육)
- 인권전문상담사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전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상담제로 상담접근성 제고 및 수어상담 관련 '손말이음센터' 협력 강화 등

○ **인권순회상담 및 인권현장대응 강화**

- 인권순회상담을 통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위원회 접근 기회 확대
-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현장 대응으로 인권문제 파악 및 위원회 대응방안 모색

4. 조정제도 활성화로 권리구제 효과 제고 [인권상담조정센터]

○ **조정제도 활성화**

- 조정제도 활성화로 실질적 권리구제 기여
- 위원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조정제도 홍보 강화

5. 조사 역량 강화 활동 [조사부서 공통]

○ 조서관 전문역량 강화

- 부서 차원 진정 사건 관련 사례·참고자료 공유, 해외 결정례 번역 및 정기적인 논의 창구 마련을 통하여 위원회 판단기준과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
- 기타 조사기법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 제공
- 조서관 토론회, 워크숍, 멘토링 등 실시 및 신규조서관의 조사전문성 제고

○ 소진 예방 프로그램 및 팀간 교류 활성화(광주인권사무소)

-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및 누적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실시
- 인권사무소 내 팀 간 교류 협력 실시

6. 조사절차의 개선 및 정비 [조사총괄과]

○ 조사·구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사절차 개선 정비

- 조사 관련 규정 및 조사매뉴얼 등 정비
- 조사업무 관련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공유 및 교육 강화
- e-진정시스템 관련 기능 개선 사항 검토 및 보완

7. 기획조사 강화 [조사부서]

○ 방문조사 강화 (조사부서)

- 경찰서 유치장(조사총괄과), 교정시설 및 외국인보호시설(인권침해조사과), 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청소년인권과), 노인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기획조사팀),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차별조사2과) 등 각 부서 소관 방문조사 실시

※ 군부대 및 군구급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관리과제 3-5-2(방문조사 활성화·내실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로 추진

○ 직권조사 강화 및 확대 (조사부서)

- 상시적인 직권조사 사안 발굴 및 적극 추진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취약계층 온라인 진정접수 접근성 강화 방안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원회신 표준안 마련(2022)
-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2022)
- 조사구제규칙 전부개정 및 훈령 제정, 조사구제 매뉴얼 마련, 직장내 괴롭힘 유형 진정사건 처리 실무매뉴얼 마련(2022)
- 특이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매뉴얼 마련 및 시행, e진정시스템 ‘조사참고사례’ 게시판 마련(2022)
- ‘조사업무 효율화 실무단(TF)’을 구성하여 진정사건 장기화 해소 및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2023)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사건처리지연 통지기한 조항 신설(2024)
- ‘국립법무병원 내 발달장애인의 생활현황 방문조사’ 및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문조사’ 실시 (2024)

참고 후속과제

- 조사관련 규정 정비 및 조사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다양한 조사업무 지원방안 검토(2026)

②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1. 인권교육 제도 개선 및 기반 확대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국가인권교육원개원준비단]

○ 국가인권교육원 건축공사(증축 및 리모델링)(국가인권교육원개원준비단)

- 국가인권교육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관리(공정·안전·품질 등) 및 준공
-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및 공간 모니터링

○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추진(국가인권교육원개원준비단)

- 국가인권교육원 조직·인력·예산·기금 확보 대응
- 국가인권교육원 관련 세부운영계획 수립, 법령 및 규정 정비, 교육여건(교통, 숙박 등) 최적화, 홈페이지 구축, 시설공사, 물품 조달, 홍보, 개원 등 준비

○ 국가인권교육원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적용(국가인권교육원개원준비단)

-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에 대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 기존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참여형 교육과정, 신규 교육과정 등 확대 가능한 추가 교육과정 모색
- 국가인권교육원 교육프로그램(모듈 단위) 및 교습 내용 적용

○ 국가인권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인권교육운영과)

- 2023년 마련된 인권교육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3차년도 모듈을 개발하여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대비
- 국가인권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모듈 개발 연구용역 실시

○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교육기관 인권교육 강화

-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교육기관 인권교육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 후속 조치 검토
- 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

○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권교육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7개 광역 시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태조사 실시
- 지방의회 의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지자체 인권증진 및 지역인권거버넌스 기반 조성

○ 아동·노인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이주배경 아동 등 교육 사각 지대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연령주의로 인한 노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 인권교육 정책 권고 이행 점검 강화

- 대학인권센터의 내실화 제고를 위한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지원 방안 모색
- 교원양성기관 인권교육 강화 권고 이행 계획 취합 및 권고 수용여부 보고
- 교원양성기관 인권교육 강화 권고 이행점검 및 관계기관 협의

2.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인권교육운영과]

○ 국가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 법 집행 및 행정 처분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공무원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확보
- 경찰 내부 인권강사 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동료 주도의 인권교육을 실현 (기관 협력 공동 운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권조사관, 인권교육담당자, 인권부서 관리자 등 지역인권 보장체계의 핵심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과정 운영

○ 지방의회의원 및 인권위원 리더십 강화

- 지역인권보장체계의 핵심 주체인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 인권기구 인권위원의 인권역량 강화

○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과정

- 초중고등학교 관리자(교장과 교감 등) 및 사회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리더십·인권역량강화 과정 운영

○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 강화

- 대학인권센터 조사관 등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과정 운영

○ 인권교육가 역량강화

- 노인 인권교육기관 강사 대상 보수 교육 기획 및 운영
- 인권교육활동가 대상 인권역량강화 과정 운영
- 스포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지원 및 역량강화 과정 운영

○ 기업과 인권 업무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 공공기관 관리자 대상 인권리더십 과정,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업무 담당자 대상 인권역량강화 과정 운영

○ 사회복지 현장 인권역량 강화

- 사회복지시설장 대상 인권리더십 과정 운영 및 권익옹호기관 조사관 대상 (장애, 노인 등) 인권역량 강화 과정 개설 협의

○ 시민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인권아카데미를 통해 일상 속에서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고취하여 보편적 인권문화 확산 도모

○ 특별인권교육 운영

- 피진정인 대상자별 특별인권교육 운영 및 특별인권교육 운영방식 체계화

3.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기반 조성 [인권교육운영과]

○ 인권강사 신규 양성

-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방안 수립

○ 인권강사 활용 및 역량제고

- 인권강사 강의현황 관리(인권특강)
- 위촉 인권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과정 운영
- 인권강사 재위촉 및 관리
- 인권강사 재위촉 기준, 역량강화 과정 운영 정비

4. 인권교육 연구 및 콘텐츠 강화 [인권교육기획과]

○ 교과용 인권도서 개발 및 인권과목 편성·운영 시범 실시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인권 교과서(2024)' 심사본 제출 준비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인권 교과서(2024)'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
- 관련 개발된 도서에 대하여 단위 학교에서 '인권 과목' 편성·시범 실시

○ 초·중고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지원·협력

- 교원양성기관 인권교육 교안 활용방안 설명회, 시범 적용 및 교안 수정·보완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및 관계기관 협의

○ AI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아동·노인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AI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아동 및 노인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술 개발 및 활용 단계에서 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스마트 돌봄 확산에 따른 인권교육 콘텐츠, AI 기술의 교육 환경 접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2024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발간, 보급, 번역 등 추진 주제에 대한 후속 활용 방안 마련 추진
- 2025년 주요 개발 영역에 대한 기획 및 적정한 추진방안 검토

5.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인권교육운영과]

○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보급을 통한 인권의식 확산

-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품질향상
- 다양한 신규 콘텐츠 제작

○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체계 품질 향상

- 콘텐츠 공동활용의 절차 개선 및 기관 확대
-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교육운영자의 편의성 도모, 향후 국가인권교육원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을 고려한 필요기능 시범 도입
-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추진

6. 인권교육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인권교육기획과]

○ 학교분야 인권교류 협력 활성화

- 학교분야 인권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와의 대면·비대면 교류협력과 기술 지원을 통한 인권역량 강화
- 학교인권협의회 등 협력체계를 통한 제도개선 수용성 확보

○ 대학인권센터와의 협력 강화

- 워크숍 등을 통한 대학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과 소통·협력을 통한 내실화 강화

○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 인권교육연구자, 인권교육활동가, 인권위 및 교육청·지자체 등의 인권교육 담당자 간 소통 및 협력의 장 마련

○ 아동·노인 인권교육 교류·협력 강화

-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지역 기반 아동·노인 인권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당사자, 관련 전문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 인권교육 협력 추진
-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 인권교육 협력 기반 조성

○ 국외 인권교류 협력 활성화

- 유엔 등 인권교육 국제회의 현황 파악 및 한국 사례 소개 등 협력기반 조성
- 국제 인권교육 사례 발굴 및 인권교육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교육 기관 방문

○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이행 강화

- 1~5차 세계인권프로그램 행동계획 번역 출판 보급 등 자료집 정리
- 5차 이행을 위한 정부(교육부 등)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5차 중점 대상, 주제 관련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 검토

7. 지역 인권교육 활동 [인권사무소]

○ 분야별, 대상별 인권교육 확대 및 강화

- 학교관리자 및 사회복지시설장, 대학인권센터 및 기업 등 분야별, 대상별 인권 교육 실시

○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역량 제고

- 인권강사 역량 강화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 제고

○ **인권문화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인권테마를 선정, 주제별·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인권체험관 운영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 원상복구 공사 등 후속조치 진행
- 인권체험관 관련 중장기계획 검토

8. 인권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인권교육기획과]

○ **인권도서관 운영 및 장서관리**

- 장서개발계획 및 단행본·비도서, 연속간행물, Web-DB 등 자료유형별 구매·구독 계획 수립, 자료 조사, 구입, 자료관리시스템 DB 구축 등
-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 인권위 간행물 발간 현황 관리와 대국민 정보 제공
- 인권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권위 연구용역 조사자료 관리 및 정보 제공

○ **인권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

- 인권도서관 정보서비스 운영 및 자료 대출서비스 제공
- 인권영화상영회 및 인권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

9. 인권콘텐츠 개발·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 [홍보협력과]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홍보 및 캠페인**

- 위원회 인권 정책 홍보 및 주요 인권 이슈 발굴 통한 캠페인 추진
- 인권문화 확산 콘텐츠 기획: 인권 주제 전시 기획, 연극 공연 등
- TV 및 라디오 대상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 **인권문화 확산 및 국민 진정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제작 보급**

- 국민의 진정권 확보를 위한 '위원회 상담 및 진정 방법 제공', '성희롱 예방 및 다양한 차별 예방', '혐오 표현 대응', '위원회 결정 사례' 등 지난 20년간의 위원회 추진 업무를 인쇄물과 영상으로 제작

○ **장애 접근권 향상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 화면 해설 음성과 자막 등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권문화 콘텐츠를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제작·보급
-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 기획·계획 수립,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 시행대상자 선정 및 배리어프리 버전물 제작 및 보급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권홍보 활성화**

- 내·외부 전문가와 인권잡지 기획
- 격월간 인권지·웹진 발행,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
- 매월 휴먼레터 발행 및 정책 고객 메일 발송
-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뉴미디어(블로그, 유튜브 등)로 배포해 온라인 홍보

○ **인권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인권공모전**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분야(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를 세분화하여 초등학생의 참여기회 확대 및 인권 교육에 활용할 다양한 콘텐츠 발굴
- 인권공모전 수상작 시상 및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

○ **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인권 가치 확산**

-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진행되는 유엔인권최고대표부 등의 캠페인과 결합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전달할 메시지 기획
- 인권의 날 기념식 계획 수립 및 진행,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 기획

10.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홍보협력과]

○ 언론홍보 내실화를 통한 인권의식 증진

-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지원
- 기획성 기사, 내·외부 전문가 인터뷰, 기고 등 기획, 주요 권고에 대한 브리핑, 기자 간담회
- 인권 관련 기사 스크랩, 주 단위 언론 모니터링 보고
- 인권보도상 시상식

11. 지역 홍보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 기반 인권 홍보활동 강화

- 인권사무소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
- 지역민과 소통하는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위원회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

○ 세계인권선언 기념 주간 행사

- 지역내 유관기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문화행사 등 세계인권선언 기념 행사 진행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2022년도 국유재산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 예산확보(2,946백만원), 설계공모, 기본설계 완료(2021)
-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2021)
-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 추진(4건: 국회, 광역지자체, 초중등 교원, 아동학대 예방 부모대상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21)
- 인권교육 과정운영안내서 및 인권교육용 결정사례집 제작 배포(2021)
- 인권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및 활용(2021)
- 사이버교육 콘텐츠 팩트북 및 온라인 인권교육 가이드북 교재 개발 배포(2021)
- 인권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21)

- 정신장애인 인권 주제 EBS '지식채널e' 공동 캠페인, 다양한 가족형태 주제 '다양성 존중' 캠페인, 혐오표현 대응 캠페인 실시(2021)
- 웹드라마 '티밍', 결정레 영상(청소년 인권, 정신장애인) 제작 및 보급(2021)
- 위원회 20주년 계기 언론 기획보도(2021)
- 인권교육원 총사업비조정(1차)총사업비조정[당초: 9,590백만원→11,857백만원 (증 2,267백만원, 23.6%)], (2차) 총사업비 조정(옹벽철거를 위한 토목공사비 1,100백만원, 35.1%)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의결(202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2022)
- 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개발 시범사업 지원(전국 7개 대학 선정 및 컨설팅 추진)(2022)
- 인권강사 1:1 맞춤형 역량향상 컨설팅, 강사용 워크북 제작 배포(2022)
- 사이버교육 이수 전자증명 보안솔루션 도입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이버인권 교육콘텐츠 13종 개발(2022)
- 군인권보호관 출범 기획 홍보 및 평등법 주제 MBC '다큐프라임' 공동 캠페인 등 진행, '기후위기와 인권' 캠페인(아트월 제작, 전시)(2022)
- 군인권보호관 출범 기획 보도 추진(2022)
-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총사업비 14,710백만원(▲공사비 11,331백만원 ▲설계비 726백만원 ▲감리비 2,612백만원 ▲시설부대비 41백만원) 확보(2023)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권고, 초·중등교육 인권교육 강화 권고(2023)
-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인권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현황 실태조사 등 추진(2023)
- 전국 대학인권센터(392개) 현황조사, 인권리더십 워크숍(4회, 119명) 및 역량 강화 워크숍 협력 운영(2023)
- 최초 농인 1명, 전맹 시각장애인 4명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2023)
- 학교, 돌봄, 공공영역,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12종)(2023)
- 인권강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기획 및 방영, 라디오 캠페인 <모두의 당연한 권리, 인권>(2023)
- 인권교육원 기공식 및 인권교육원 설립 운영 기본계획 마련(2023)
- 학교, 돌봄,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14종)(2024)
-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제도개선 권고(상임위 상정), 대학인권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4)
- 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을 앞두고, 2023년에 157개의 교육 모듈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고, 이 중 50개의 모듈을 우선 개발하였음. 2024년에는 교수 학습 내용이 개발되지 않은 모듈 중 범용성, 시급성을 고려 7개 분야, 45개 모듈 개발(2024)

- 사이버인권교육콘텐츠 4종 개발(인권의 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인권경영의 이해 등) (2024) 위촉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기존의 대면 중심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인권강사들의 참여율 증가와 실질적 교육 효과 증대(2023년 33명 → 2024년 53명 참석)
- 인권영화 <힘을 낼 시간> 전주국제영화제 3관왕(작품상, 배우상, 왓차상) 수상 및 개봉, 인권영화 배리어프리버전 영화 제작 및 <찾아가는 배리어프리 인권영화제> 개최(2024)
- 인권강연 EBS 클래스 e <인권사색> 제작 및 보급, 네 번째 인권만화 <호시탐탐> 발간, 한겨레 21 공동 <이주와 인권> 연속 기획·보도 등(2024)
- 위원회 권고 및 활동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인권보도상 시상(2024)

참고 후속과제

-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후 안정적인 인권교육 과정 운영(2026)
- 사이버인권교육원 시스템 구축(2026)

③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1. 인권·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 [홍보협력과]

○ 인권옹호자회의를 통한 교류·협력 강화

- 각 지역에서 인권옹호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등과 인권현안 공유 및 위원회와의 협력 기반 강화
- 인권옹호자회의 기획회의 및 준비,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내실화

- 시민사회단체의 인권보호·증진 활동 지원을 통한 민간영역의 인권옹호 역량 강화 및 인권문화의 저변 확대
- 보조금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진행
- 2025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월별 사업비 집행 상시점검,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사업 평가 및 우수사업 선정 등

○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례적·일상적 협력 강화

-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인권현장 방문
- 인권시민사회단체 요청 검토 및 지원, 인권시민사회단체 배움터 사용 지원

2. 지역 교류협력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내 인권현안 공동협력 강화

-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시적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인권현안 및 공동사업 발굴, 협의회·간담회·워크숍, 토론회, 특강, 인권영화제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
- 노인·아동·장애인 권리보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인권옹호자회의 연례 개최(2021~)
 - ‘우리 사회 인권 현주소와 전망 - 인권옹호자 활동을 중심으로’(2021), ‘지역 인권제도화 10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과 전망’(2022), ‘비엔나선언 30주년, 구슬로 본 한국사회 등’(2023), (한국사회 인권 현안과 22대 국회 입법과제 등’(2024)
-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개선방안 마련(2021~)
- 인권사무소의 지역 교류협력 활동 지속 추진(2021)

④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1.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홍보협력과]

○ 지역인권보장체계 안정화 구축

- 지자체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
- 지자체 인권행정 평가제 보완
- 지자체 인권행정 관계자 역량강화 공동기획

○ 지역민 인권증진 실질화

-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인권친화성 강화 체크리스트 개발
- 위원회-지자체-인권사무소 협업 사업 매칭

○ 실효적인 지역인권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

- 인권현안 및 지역인권증진을 위한 사무처와 인권사무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부산·광주인권사무소 개소 20주년 기념 토론회 등 공동사업 추진 검토

2.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인권 거버넌스 강화

-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 시민사회단체,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대학인권센터 등 지역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인권현안 공유 및 신속 대응, 공동협력사업 추진

○ 인권사무소 개소 20주년 기념행사

- 지자체 및 지역인권옹호자들과 함께하는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지자체 인권정책 안내서 발간, 지역인권전문위원회 구성·운영(2021)
-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인권정책영향평가 등의 방법 및 지표개발 연구(2022)
- 지자체 인권행정 평가제 제도 설계(2023) 지자체 인권 기반 제도화 구축
-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 심사 관련 의견표명,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발간,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개발 (2023)
- 대학인권센터(392개) 현황 조사(2023)
 - 광역인권위원회협의회 협력 및 공동사업 제안,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공동주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협력
- 부울경시민사회단체소통협의회 등 인권사무소별 권역별 인권단체협의회 개최 (2021~)
-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 체결 (2023)
-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 업무 종합계획 및 지역인권 증진을 위한 사무처 및 인권사무소 역할 재정립 방안 보고, 자체 인권행정 평가제 시범 운영 (2024)
-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현황 및 인권행정 적용 실태조사, 지자체 사회복지 인권 모니터링 용역 실시(2024)

⑤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1. 군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군인권보호총괄과]

○ 군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군인권 개선 추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
- 군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적·제도적·정책적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 이행 시기와 추진 방안 제시
- 군인권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등

○ 초급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

- 「2024년 초급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초급 부사관의 인권 보장 방안 마련

○ 군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군인권보호관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모니터링 및 검토, 국방부·국회 등 유관기관 협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안 작성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그 외 군인권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 검토

2. 방문조사 활성화·내실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

○ 군부대 방문조사

- 방문조사 주제 및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 조사, 언론 모니터링, 이전 방문 조사의 성과 분석, 방문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 방문조사 계획 수립 작성 및 현장조사 등 실시
- 방문조사 보고서(군부대의 문제점, 시정 필요사항 적시 등) 작성 및 개선 권고 등 후속 조치

3. 군인권 현안 적극 점검·대응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 군인권 현안·법령 모니터링 및 대응(군인권보호총괄과)

- 위원회 기사스크랩, 온·오프라인 언론 보도, 군 관련 법령, 군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현황 분석 및 관련 법제 검토, 선진사례 분석 등

○ 군 사망사건 조기 개입 등 적정한 대응 체계화(군인권조사과)

- 사망사건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및 관련 기초 사실관계 파악
- 유가족 요구사항 확인 등 지원체계 강화
- 사망원인 관련 인권침해적 배경 여부 파악

○ 군인권 기획조사 강화(군인권조사과)

- 군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중대성과 상당성 고려 직권조사 발굴
- 개별 진정사건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등 확대조사

4. 군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대응 강화 [군인권협력지원과]

○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 성고충 처리 제도(관련 규정, 매뉴얼 등),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 관련한 해외 정책사례 조사 분석
- 군 성차별·성희롱 등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안 검토

○ 군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개선

- 군 성차별·성희롱 관련 전문가 등 토론회 개최 및 방문조사 실시
- 권고이행 실태점검 및 방문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 및 시민사회 단체 의견수렴,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군 성차별·성희롱 및 성소수자 인권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

○ **군 성차별·성희롱 사건 조사의 전문성 강화**

- 군 성평등 전문가 목록 등을 활용하여 전문성 확보
- 군 진정사건 관련 상시적 조사관 토론회 개최 및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조사 및 보고서·결정문 작성 방법 공유

5. 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 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 [군인권협력지원과]

○ **군인권교육 관련 규정 정비 및 제도 개선**

- 군인권교육 기본계획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군인권교육 관련 제 규정 정비
- 원활한 군인권교육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 등 제·개정

○ **군 인권교육 직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 군인권교육 직무별(법무, 수사, 상담, 정훈, 교도 등) 맞춤형 콘텐츠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인권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 각 직무별 특수성에 따른 콘텐츠는 명확한 교육목표를 구분하여 설정, 교육 대상별 특수성·구체성·현장성 담보

○ **군인권 교육과정 운영**

- 인권강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군인권교관 심화과정 운영
- 각 군과 협조하여 지휘관 등 장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교육 공동운영
-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 등 사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휘관, 상담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 군인권교육협의회 개최 등으로 국방부, 각 군 인권교육 담당자 등과 유기적 소통·협력 창구 유지

○ **군인권 홍보 강화**

- 군 인권 및 군인권보호관제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성차별·성희롱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6. 군 인권 국내외 협력 활성화 [군인권협력지원과]

○ 군인권 국내 협력 강화

- 군인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학계, 관계기관 등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군인권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협력 강화

○ 군인권 국제협력 활성화

- 군음부즈기구 국제콘퍼런스 참석
- 해외 군음부즈만 기구의 군인권증진을 위한 우수사례 정리 및 해외 군인권 동향 파악

7. 효과적인 군인권업무 지원체계 구축 [군인권보호총괄과]

○ 군인권 담당 조사관 역량 강화

- 군인권 특성에 맞는 조사기법 등 군인권 업무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조사관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군 사망사건 현장에 입회한 조사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또는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공상 사전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실시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군대 내 장병 의료 및 건강권 보장 강화(2021)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군인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2021)
- 군인권보호관 도입 지원 및 협력기반 마련(2021)
- 군 구급시설(육군3, 해군1, 공군1, 해병대1) 방문조사(2021)
- 군 장병 의료 접근권 개선 권고(2022)
- 신병 훈련소(육군, 해병대) 방문조사(2022)
- 군부대(동부전선 격오지, 해군2함대, 군기교육대) 방문조사,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2023)

- 군 급식환경실태조사, 군인권교육 운영현황 실태조사, 군인권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2023)
- 군인복무기본법개정안 의견표명,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권고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목욕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표명, 군사망사고 예우·지원 관련 제도개선권고(2023)
- 군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2023)
- 사망사건 입회, 조사관 심리지원(2023~2024)
- 초급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인권교육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2024)
- 육군사관학교, 해병대, 여군,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공군, 군 구급시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등 방문조사(2024)
- 군기교육대 방문조사에 따른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해병대 방문조사에 따른 장병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군수용자 사망사고 관련 국군교도소 직권조사 의견표명, 군의 병력관리 소홀로 인한 병사 자살시도 의견표명, 국군인 자살사고 예방 체계에 관한 직권조사 의견표명 등(2024)

참고 후속과제

- 지속적인 군부대 방문조사 실시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2026)
- 조사구제 지속 및 군 사망사건 적정대응(2026)
- 군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대응 강화(2026)
- 군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지속(2026)

⑥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1. 인권정책 추진 관련 기획·분석·평가 및 조정 [인권정책과]

○ 인권정책 업무 방법 개선을 위한 검토 프로젝트

- 읽기 쉬운 결정문 쓰기, 정책업무 부서간 협업 등 인권 정책 업무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개선방안 모색 및 공유

2.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정책부서, 조사부서]

○ 권고·의견표명 이행실태 확인·점검

-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필요시 현장점검), 점검 및 분석

3. 인권NAP 이행 모니터링 및 제도화 강화 [인권정책과]

○ 제4차 인권NAP 이행 모니터링

- 정부의 제4차 인권NAP(2023~2027) 이행상황 발표 모니터링
- 위원회 차원의 자체 점검

○ 인권NAP 제도화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정부가 2007년부터 5개년 단위로 인권NAP를 수립·이행·평가하고 있지만, 유엔이 발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등에 따라 제도적 개선 필요
- 인권NAP 수립 과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자료 검토,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적, 효율적 제도 운영 및 홍보 방안 등 모색

4.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관리 [인권정책과]

○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 국가인권통계 검증 및 신뢰성 제고, 인권지표 선정, 행정자료 등 추가 자료원을 활용한 신규통계 추가 발굴 등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 및 국가인권통계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지표 개발 방안 모색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2021, 2022, 2023) 발간
-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3개년도(2019~2021) 국가인권통계 구축(2021)
-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 및 국가인권통계 구축(2022~2024)
- 제4차 인권NAP 권고(2022), 평가 토론회 개최(2024)
- 정부 NAP 초안 공청회 및 간담회 참석(2023)
-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개정(2023)
- 권고·의견표명 이행실태 확인·점검 시범 운영(2024)
- 인권정책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 교육과정 운영(2024)

⑦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1.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 인권증진행동전략을 구체화한 업무계획 수립을 통하여, 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달성

○ 인권증진행동전략 수립

- 위원회의 중장기적 목표와 활동 방향이 인권환경 및 위원회 여건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기획재정담당관, 인권정책과)

- 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를 위해 영문판 인권보고서 발간

○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발간

-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통계를 작성하여 위원회 활동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위원회 업무 방향 정립에 활용

○ 제안제도 운영

- 업무 개선을 위해 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집하고 활용
-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안 채택 및 이행 점검

2. 위원회 성과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위원회 업무평가

-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다각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더 효과적인 업무 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위원회 성과 제고에 기여

○ 분기별 업무점검

- 주기적 위원회 업무점검, 부서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위원회 업무의 효과성 제고

○ 만족도 조사

- 상담·민원, 진정, 인권교육 등 위원회 주요 대민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관계 부서 사전 설명회 및 조사 결과의 업무 반영을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

3.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기획재정담당관]

○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 2026년 정기직제 및 수시직제 협의 등 조직 확충, 신설기구 평가 대응 및 총액인건비제·재배치정원제·팀제 등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4. 전략적 자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전략적 자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 전략적 자원 배분과 예산 편성
- 분기별 예산집행점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을 통한 효과적 예산집행 관리
- 재정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내실화를 통한 체계적 예산 성과관리

5.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기획재정담당관]

○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국회 업무 수행
- 국회 상시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대국회 지원

6. 안정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행정법무담당관]

○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등의 안정적 수행

- 행정심판위원회 정례 개최, 행정심판 재결례 공유 및 관련 교육 등을 통한 진정사건 조사의 적정성 제고
- 진정사건 결정 등 위원회 대상 소송 수행
- 위원회 결정 취소판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결정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 및 조사부서 공유

○ 위원회 법령의 시의적절한 정비

-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검토 및 의견제출
-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인 심사 수행

○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자문 등의 적시 지원

- 각 부서의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회신
-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에 자문 의뢰 등 통해 심층적 검토

○ 업무협약 및 비영리법인의 체계적 관리

- 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정밀한 심사, 추진현황의 점검 및 보고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의 면밀한 검토 및 위원회 상정, 사무점검 등 기 설립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발간사업

- 위원회 결정례집, 법규집, 공보 등 발간

7. 체계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행정법무담당관]

○ 체계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 2024년 감사지적사항 이행사항 점검 및 2025년 자체감사 실시
- 징계위원회 운영 및 사무관리, 수사기관 수사결과 통보·제보 등에 대한 특별 감사 및 조사, 직원 관련 민원 처리, 일상감사
- 반부패·청렴교육, 외부강의신고, 공직자 병역·재산신고 지원 및 관련기관 업무 협조,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처리 등

8.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제고 [행정법무담당관]

○ 기록물관리 지도·감독과 정보공개 통계관리

- 처리과에서 생산·접수되는 기록물의 등록, 분류, 편철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기록물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 도모
- 정보공개통계자료를 작성해 법정기한 준수율을 높이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

○ 정보공개적 적정성 제고

- 진정사건기록 및 일반정보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유관기관 수사 및 자료협조와 문서송부촉탁 의뢰 처리 등

9.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보화관리팀]

○ 인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보안장비, 기반시설 등 정보인프라의 운영 관리

○ e-진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e-진정시스템, 인권정책시스템, 통계시스템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 e-진정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10.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관리팀]

○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 위원회 본부와 인권사무소를 연결할 수 있는 화상회의시스템 설계
- 위원회 네트워크 인프라와 연계

○ 망연계시스템 구축

- 위원회 내부 중요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통한 정보보안 강화
- 직원들의 PC 간 안전한 자료전송을 위한 망연계시스템 구축

11. 정보화기기 개선 및 정보보호 수행 [정보화관리팀]

○ 정보화기기(H/W, S/W) 개선

- 노후화된 정보화기기(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 교체
- 아래아한글, MS 오피스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 정보보호 수행

- 바이러스 백신 솔루션 도입을 통한 컴퓨터 보안 강화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직원 의식 강화

12.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관리팀]

○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방법, 디지털 툴(Tool) 교육 등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13. 교육 내실화를 통한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운영지원과, 인권교육운영과]

○ 교육 내실화를 통한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운영지원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강화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법정 의무교육 실적관리 강화
- 효과적인 신규자 교육 실시

○ 직원 역량강화 교육(인권교육운영과)

- 인권조사관 학교 및 인권정책학교 등 인권전문학교 운영을 통해 인권옹호자로서 직원 직무 역량 제고

14.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 [운영지원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 인사의 공정성 확보 노력
- 충원 및 보직관리의 효과성 제고
- 공정한 평가제도 정착 및 개선
- 상훈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 복무와 업무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근무여건 확립

15.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운영지원과]

○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 내실있는 직원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
- 직원 복리 후생 향상과 직원 고충 예방 대응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
- 공무원·공무직 노조와의 상호존중의 노사문화 정립

16.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운영지원과]

○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 전원위, 상임위 의사의 안정적 운영과 인권위원의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지원

17. 청사 관리 및 보안 업무강화 [운영지원과]

○ 청사 관리 및 보안 업무 강화

- 청사보안 시스템 점검 및 미비점 보완
- 직원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고려한 청사 시설 및 환경 개선
-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청사시설 점검 등 인권 친화적 청사 환경 개선
- 정기 보안점검을 통한 화재예방 및 문서보안 관심 제고
- 을지연습, 화재, 지진 등 대피훈련 등 훈련 실시
-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적정한 당직업무 수행 지도

18. 예산의 효과적 운용 및 회계·결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지원과]

○ 예산의 효과적 운영 및 회계·결산의 체계적 관리

- 예산 집행 전문성·일관성 제고
- 회계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 결산 심사 등에 효과적 대응
- 예산운용 및 공제 사무의 체계적 관리
- 연말정산 및 성과상여금 적정 지급

참고 관리과제 추진 실적

- 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실시(대통령 등 주요 인사 참석)(2021)
-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편찬(2021)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군인권보호관 규정)(2021)
- 인권 의사지원 시스템 구축, e-진정시계열통계 시스템 구축(2021)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10대 인권과제 제시(2022)
- 군인권보호국(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협력지원과) 신설(2022)
- e-진정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23)
- 위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응(2024)
- 인권자료관리시스템(사이버 인권도서관) 구축(2024)
- 홈페이지 및 인권e에 전자점자 서비스 제공(2024)

참고 후속과제

- 인권사무소 화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2026)
- 사이버 인권교육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26)
- 국가인권통계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26)
- 국회업무자료관리시스템 구축(2026)